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승화 연구위원

- ▶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생산인구 감소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돌봄체계의 변화와 생활양식, 가치관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임.
- ▶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가족의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결혼·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정책에 대해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했음.

CONTENTS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정책 현황
- III. 저출생 대응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구성
- IV. 저출생 대응관련 정책수요 분석
- V. 정책 과제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 보육, 일·가정양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율 제고에 집중된 실적주의적 인구관리 관점의 정책은 여성의 건강과 다양한 생애주기 속 남녀 모두의 재생산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저출생 대응은 인구정책의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동시에 개개인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건강권 보장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서 설계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 격차가 큰 주요 정책에 대해 젠더 전문연구자가 시민의 다양한 수요(성별·연령·장애 등)를 반영해 심층 분석하고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임.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 정책 중 결혼·임신·출산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의 건강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혁신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인지적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브리프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2025년에 발간한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혼·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기반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정책브리프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음.

- 따라서 성별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정책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건강한 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II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정책 현황

1 2024년과 2025년 인천광역시 결혼·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 현황

-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중 결혼·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사업과 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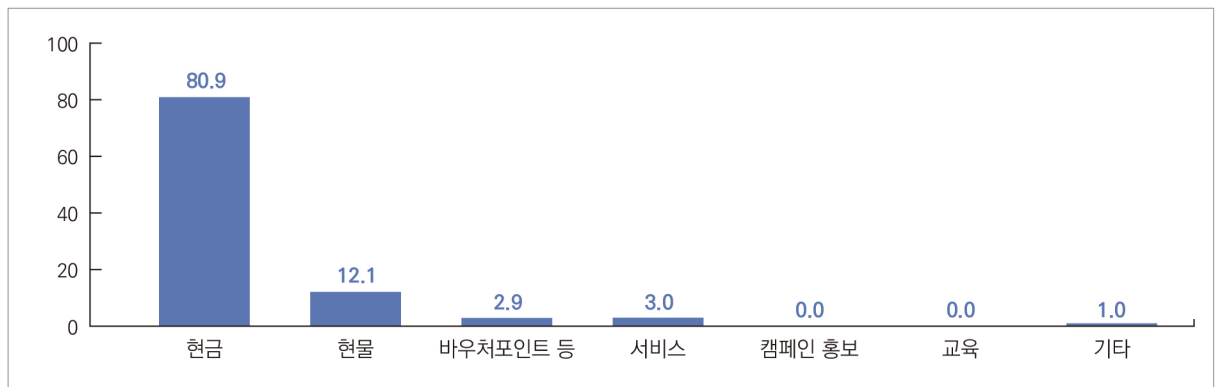
<표 1> 2024년과 2025년 인천광역시 결혼·임신·출산 관련 사업의 사업주체 예산액

단위 : 백만원

사업주체 유형	2025 예산액		2024 예산액		증감액
공동사업(국가+지자체)	290,247	77.2	342,625	87.2	-52,378
시 자체사업	78,309	20.8	37,964	9.7	40,064
군구 추진사업	6,845	1.8	11,608	3.0	-4,763
교육청 추진사업	607	0.2	629	0.2	-22
공사공단 사업	0	0.0	0	0.0	0
합계	376,008	100.0	392,826	100.0	-17,099

출처 : 2025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예산 자료 재구성

- 인천광역시 2025년 저출생 대응정책 사업 중에서 결혼·임신·출산 관련 사업 예산액은 3,760억 여원이고 이 중 국가와 지자체 공동사업 예산은 77.2%, 시 자체사업 20.8%, 군·구 추진사업 1.8%임. 대부분 사업이 공동사업과 시 자체사업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음.
- 현금지원 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이 현물지원 사업 순임. 기타사업으로는 천원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임신한 공무원 검진휴가부여 등의 지원사업이 있음. 캠페인홍보 등의 사업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도 많아서 예산 비중이 낮았음.



[그림 1] 2025년 인천광역시 결혼·임신·출산 관련 자체사업의 지원유형 예산액

출처 : 2025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예산 자료 재구성

2 군·구 결혼·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 검토

- 군·구 추진사업은 현금지원 사업이 2025년 92.7%, 2024년 96.4%로, 현금지원 사업 비중이 시보다 더 높았음. 2025년 예산 기준으로 옹진군, 강화군, 서구, 부평구가 현금지원 사업 비율이 높았음. 미추홀구는 캠페인과 홍보예산이 23.8%로 상대적으로 타군구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전체적으로 결혼·임신·출산 관련 지원 예산이 6천 3백만 원으로 적은 편임.

- 강화군이 매년 농어촌 총각 1명에게 3백만 원을 지원하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이주여성 매칭을 통한 매매혼 조장과 '인권침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2025년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25개 지자체에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강화군은 2025년 11월 관련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고, 성별영향평가 권고 등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해당 사업을 최종 종료 했음.

III 저출생 대응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구성

1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 성인지 분석 지표 구성

- 성평등가족부에서 수행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정재훈 외, 2017)에서 제시한 임신·출산 지원에 대한 젠더 분석틀을 참고하여 성인지 분석틀과 평가 지표를 재구성함. 아래 <표 2>와 <표 3>은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정책 중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 분석을 위한 성인지 분석틀(안)과 평가지표(안)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거쳐 수정·보완하였음.

<표 2> 저출생 대응정책 중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 성인지 분석틀(안)

항목	주요내용
정책목표 내 성인지 관점	① 정책 목표가 인구수 조절이 아닌 재생산 및 건강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② 여성을 '가임기 여성'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자율적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가? ③ 합계출산율 등 양적 지표보다 시민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재생산권 보장	① 임신·출산의 시기, 간격 등을 여성이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가? ② 안전한 피임방법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가? ③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는가?
생애주기별 접근	① 청소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생애 전반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고려하는가? ② 임신·출산 시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여성건강을 다루고 있는가?
성별 형평성과 참여	①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가? ② 정책수혜대상이 성별, 혼인상태(미·비혼모)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가? ③ 장애,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의 재생산 건강 필요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서비스 접근성	① 지역 및 계층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격차가 있는가? ② 성별 및 지역, 연령에 따라 정책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있는가? ③ 결혼·임신·출산 관련 교육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가?
정책 추진체계	① 임신·출산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② 정책 기획·집행·평가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표 3> 저출생 대응정책 중 결혼·임신·출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성인지 평가지표(안)

영역	구분	점검사항
1. 법령 및 제도 등의 성별 관련성	공통	• 조례·지침에서 "가임기 여성"처럼 특정 성별을 대상화하는 표현이 없는가? • 지원 자격을 규정한 조례가 부모와 부모 외 다양한 양육자 모두를 동등한 신청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가?
	교육프로그램형	• 사업 운영지침·교육운영 표준안에 성평등·성인지 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정책대상	공통	• 신청서에 부·모, 가족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 저소득·한부모·이주여성 등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가?
	홍보·캠페인형	• 포스터·영상 등 홍보물에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였는가?
3. 서비스 접근성	공통	• 농·어촌지역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교육프로그램형	• 야간·주말반 등 직장인을 고려한 운영시간이 있는가?
	홍보·캠페인형	• 홍보물 배포·캠페인 참여가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이뤄지는가?

영역	구분	점검사항
4. 정책 내용	현금지원형	• 부모 외 양육자의 경우 차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가?
	현물지원형	• 용품이 남아/여아 구분 없이 제공되는가?
	교육프로그램형	• 교육내용이 성역할 고정관념(엄마만 돌봄주체 등)을 강화하지 않고, 남성의 돌봄참여 시각을 반영하는가?
	홍보·캠페인형	• 다양한 가족형태(한부모·다문화·입양·비혼 등)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가? • 홍보 이미지와 문구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지 않는가? • 캠페인이 돌봄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 책임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가?
5. 홍보	공통	• 홍보물 제작을 위해 정부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항목을 참고하였는가?
6. 사후평가 및 환류	공통	• 성별·연령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성별·가구유형별 수혜 데이터가 차년도 계획에 반영되었는가? • 성별 분리된 만족도 결과가 차기 사업에 반영되었는가?

※ 사업은 현금지원형, 현물지원형, 서비스(바우처)지원형, 교육프로그램형, 홍보·캠페인형으로 구분함.

2 저출생 대응정책 성인지 평가 결과

■ 결혼 지원 정책

- 결혼 지원 정책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임. 저출생 현상은 결혼 기피보다는 주거비 부담, 양육비용 증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임. 따라서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정책은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 구성의 다양성, 개인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아이플러스 이어드림(커플축제) 사업

- 결혼장려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이플러스 이어드림(커플축제) 사업은 결혼이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도식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데, 결혼 장려를 통한 저출생 대응이라는 접근은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비혼 선택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간접적 차별 효과를 발생시켜 개인의 생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임신·출산 지원 정책

- 인천광역시 2025년 저출생 대응정책 중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추진 방안은 저출산 대응 기반 강화 및 출산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임.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2025년 시술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늘리고 연령제한을 폐지한 부분은 다양한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임.

◆ NON-STOP 출산장려지원 사업

- NON-STOP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교육과 지원으로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신부를 포함하여 부부 및 아파교실도 운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을 함께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임. 그런데 출산은 개개인의 출산의향에 따라 결정할 문제임으로 출산장려지원 사업이라는 명칭보다는 출산 친화 환경조성 사업으로 사업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출산·육아 건강 교실의 대상으로는 “인천광역시 관내 가임기, 임신부 및 예비아빠, 양육부모 등”으로 하고 있는데, “가임기” 등의 표현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예비아빠와 양육 부모 등”으로 정책 대상을 표현하여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고려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육자를 부모로만 한정하고 있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정책 대상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
-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함께 돌보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므로 부모교육에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도 첨가될 필요가 있음.

◆ 편안한 산후조리비 지원

- 정책사업의 지원대상을 산모로 명시하여 출산 경험자에게 직접 지원하되, 혼인 여부나 가족 구성 형태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았음. 이는 미·비혼모, 한부모가족 등 모든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성평등한 정책 설계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필요 등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사업의 정책대상

설정에서도 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장애인 및 배우자, 다문화가족, 청소년 부부,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차적 불평등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보여줌. 온라인(인천이음 앱, 홈페이지)과 방문 신청을 모두 허용하여 다양한 상황의 산모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대리인 신청 시 방문 신청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점은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4〉 저출생 대응정책 성인지 평가 결과 요약

사업명	평가항목	긍정적 사항	개선필요사항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커플축제)	- 법령 및 제도 등의 성별 관련성 - 정책 대상 - 사후평가 및 환류		- 다양한 가족 구성형태에 대한 포용성 결여 - 개인의 자기결정권보다 국가 인구정책 목표를 우선시함 - 결혼=출산 도식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사회적 의무로 접근 - 생물학적 재생산 능력 중심 대상 선별 - 정책목표 달성 측정 불가능
아이플러스 맺어드림 (나만의 결혼식)	- 법령 및 제도 등의 성별 관련성 - 정책 대상 - 사후평가 및 환류		- 예비부부로 한정하여 법적 혼인 관계만 인정 - 혼인신고(법적절차)와 별개인 사회적 의례에 공적 자원 투입 - 실질적 생활안정·양육환경 개선보다 상징적 행사 우선 - 출산 의향 제고 효과에 대한 조사 불가능
찾아가는 인구교육	- 정책 대상 - 서비스 접근성 - 사업내용	평일 낮, 저녁 시간대 운영으로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을 제공함	- 위탁기관의 강의 내용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사전 점검 절차가 필요함 - 강의안·홍보물 등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법령 및 제도 등의 성별 관련성 - 정책대상 - 서비스 접근성	- 지원대상을 산모로 명시하여 혼인 여부 등 가족 구성에 대한 조건 없음 -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 포함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	대리인 신청 시 방문신청만 가능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동구)	- 정책대상 - 서비스 접근성 - 사업내용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직접적으로 장려해 성평등한 돌봄 분담을 촉진하고 있음	- 접근성 격차가 커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특고 종사자 대상의 지원방안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 홍보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함
중구형 아이(이)마중 건강관리 지원 (중구)	- 정책대상 - 서비스 접근성 - 사업내용	-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성평등한 임신 준비를 지원함 -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보장됨	향후 사업 안내문 및 지침에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문구 보완 필요
출생신고자 출산축하용품 (동구)	- 정책대상 - 서비스 접근성 - 사업내용	부모 외 양육자(조부모 등)도 신청 가능	출생축하용품, 홍보물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표현 여부 확인 필요
우아한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 만들기 (미추홀구)	- 사업내용 - 사후평가 및 환류	가족 단위 참여로 긍정적 출산·육아 문화 조성	- 교육내용 및 홍보물 성인지 관점 검토 절차 필요 - 성별분리통계 수집 필요
저출산 대응 구민의회식 교육(인구교육) 및 인식개선캠페인 (부평구)	- 정책대상 - 서비스 접근성 - 사업내용	-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취약계층도 포괄함 - 교육 내용에 성평등 의식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함	- 강의안에 대한 사전 성평등 관점 검토 절차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보완 필요 - 향후 성별 통계 분석 결과를 사업 개선에 환류하는 체계 구축 필요
임신·출산·육아 종합 안내책자 제작 (계양구)	- 서비스 접근성 - 사업내용	- 정책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 -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배포, 전자책(PDF) 제공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접근 가능	- 책자 내 일러스트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표현이 확인됨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포괄성 부족 - 향후 홍보물 제작 시 성평등 관점 사전 검토 절차 필요

사업명	평가항목	긍정적 사항	개선필요사항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서구)	- 정책대상 - 서비스 접근성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 지원 사업 -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포괄 -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신청 가능	- 서구사랑상품권(서로e음카드) 지급 방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방문 신청 외 온라인 신청 등으로 접근성 향상 필요

IV 저출생 대응관련 정책수요 분석

1 조사 개요

- 저출생 대응정책의 직접 정책 대상자인 20대~4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에서 만 45세까지의 청년과 장년층 10명을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 두그룹으로 나눠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 면접내용은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결혼관, 혼인의향, 출산의사, 결혼·임신·출산에 대해 필요한 지원 정책 등임.

2 저출생 대응관련 정책 수요 분석 결과

- 면접조사에서는 결혼 전 동거를 하는 경우와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사례가 매우 보편화된 경향임을 시사하였음. 면접 참여자들은 ‘커플 매칭’ 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이들은 커플 매칭 사업이 시장의 영역을 침범한 공공성이라고 인식하며,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치러지는 일회성 사업이자 과도한 세금 낭용 행사라고 인식함.
-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하는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연애나 파트너쉽 관계에서 동거를 안정된 생활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었음.

“저는 그 돈을 좀 아껴보자 월세를 아끼자 이 취지로 동거를 한 2년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 동거를 하니깐 아 좀 짜증도 많이 나고 많이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어요.” (면접자E 여성 31세 기혼)

- 결혼은 아이를 갖게 되었거나 수술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법적 보호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 결심하게 되었음. 많은 동거 커플이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음. 참여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안정된 주거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말함.

“둘이 살 때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좀 불가능하겠더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네 면제적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면접자D 남성 31세 비혼)

- 인천광역시의 천원주택에 대한 호응도는 높았지만 공급 가구수가 많지 않아 체감도가 낮다고 응답함.
- 면접자 중 일부는 결혼과 출산을 꼭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음. 반드시 남성 배우자를 통해서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결혼 과정이 없어도 출산을 할 수 있다는 ‘비혼 출산’을 고려하기도 함.
- 결혼에 앞서 동거인이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성별과 상관없이 현재 함께 생활하면서 상호 돌봄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동거인도 가족으로서의 법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임.
- 유산을 경험한 면접자는 유산 후 상담치료에 대해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함. 여성들은 임신·출산과 관련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 남성들은 출산의 문제를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큰 편이었고, 여성들은 남편과의 관계나 자기정체성, 일에서의 성취 등 자아와의 관계를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음. 남성이 결혼과 출산을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들은 출산과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만족스러운 파트너십에 대한 욕구도 큰 편이었음.
-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큰 편이었음. 여성들의 출산 의사에는 남편과의 좋은 관계 및 육아

- 의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며, 직장과 사회에서 육아가 개인이 사적으로 감수할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과 시민으로서의 삶 모두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정착될 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논의함.
- 결혼을 장려하는 사업이 아닌, 가정과 기업문화 속 성평등한 가족관계 정책과 ‘시민 모두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필수조건임을 시사함.

V 정책 과제

1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 시행

- 2021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성인지 관점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구정책위원회는 총괄적인 인천광역시의 인구관련 정책을 아우르는 영역이어서 저출산 대응 및 젠더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2 저출생 대응정책 사업 추진의 성인지성 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 저출생 대응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구성단계에서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

〈표 5〉 저출생 대응정책 중 결혼·임신·출산 관련 정책 성인지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주요 내용	점검
정책목표 내 성인지 관점	① 정책 목표가 인구수 조절이 아닌 재생산 및 건강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② 여성을 ‘가임기 여성’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자율적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가? ③ 합계출산율 등 양적 지표보다 시민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재생산권 보장	① 임신·출산의 시기, 간격 등을 여성이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가? ② 안전한 피임방법과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가? ③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는가?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생애주기별 접근	① 청소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생애 전반의 재생산권 및 건강권을 고려하는가? ② 임신·출산 시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여성건강을 다루고 있는가?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성별 형평성과 참여	①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가? ② 정책수혜대상이 성별, 혼인상태(미·비혼모)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가? ③ 장애,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의 재생산 건강 필요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서비스 접근성	① 지역 및 계층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격차가 있는가? ② 성별 및 지역, 연령에 따라 정책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있는가? ③ 결혼·임신·출산 관련 교육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가?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정책 추진체계	① 임신·출산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② 정책 기획·집행·평가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③ 서비스 전달체계(수행사, 업체, 실무자 등)가 성인지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3 성인지적 관점의 인구 교육 실시

- 인구교육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되, 가족 다양성과 성평등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함. 특히 강의안과 홍보물 등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위탁기관 및 수행·실무 단위 성인지성 강화

- 저출생 대응정책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와 대행사의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콘텐츠에 대한 사전 검토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함.

5 법률혼 중심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 탈피

-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저출생 대응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 등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출생 아동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음. 임신이나 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수혜 대상을 법률혼 부부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비혼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을 포함하여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커플 매칭 사업의 전환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커플 매칭 사업은 만남 주선의 형태보다는 젠더 갈등 극복을 통해 평등한 연애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성인지 관점의 연애 코칭 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고령출산, 유산 및 사산 경험을 한 부부를 포함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

- 만혼 현상이 증가하면서 고령출산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난임 치료 과정에서 다태아 임신 및 유산 경험도 증가하고 있음. 심리적 건강과 신체 건강, 그리고 가족 갈등 등의 해소를 위한 지원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난임 부부와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의 상담에 남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생애 경험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육아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한 자조모임 등이 지원되고 있듯이,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부터 아버지의 역할과 평등한 가족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8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임신·출산 지원

-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휴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IFWF 정책브리프



- IFWF Brief(No.91) 지역성평등지수가 보여주는 인천의 안전 현황
- IFWF Brief(No.90) 성평등한 인천 사회로의 전환: 정책 아젠다와 실천과제
- IFWF Brief(No.89)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스토킹 범죄 현황 분석
- IFWF Brief(No.88) 인천 여성 단기일자리, 가교를 넘어 도약으로
- IFWF Brief(No.87) 인천광역시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책브리프를 찾아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 채널 추가하세요. +

인천여성가족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Women & Family

213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Tel 032) 511-3141 Fax 032) 518-3828
www.ifwf.or.kr COPYRIGHT(C) INCHEON FOUNDATION FOR WOMEN&FAMILY ALL RIGHT RESERVED

